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관대성 결정요인 분석

정민섭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수로)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 론

장애인복지는 현대 복지국가 발전과 함께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왔다. 20세기에 들어 장애인복지가 발전해온 과정을 대략적으로 개괄해 보면 서구 복지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발달시켰으며,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비스 관련 제도들을 발달시켜 왔다. 이러한 흐름은 서구 복지국가를 넘어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에도 전파되어 장애인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구현을 위한 각종 장애인서비스에 관련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의 발전 방향에 어느 정도의 공통적 흐름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적 모델을 탈피하고 사회적 모델로 발전해 가는 경향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방향에 일정한 경향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장애인복지수준이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국가경제력과 정치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에서 양대 축인 소득보장제도와 고용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득보장 수준이 높고 고용보장 수준은 낮은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용보장 수준은 높고 소득보장 수준이

* 정민섭,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정책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석사과정은 미국 Washington University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MSW 과정을 이수하였다. 주 전공 분야는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이다. 현재 연구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정책과 시각장애 관련 연구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정책의 국가간 비교연구, 장애인복지제도 중 접근성에 관련된 법제도 및 시각장애 관련 실천적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낮은 나라도 있다. 또한 둘 다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도 있고, 둘 다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장애인복지 수준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복지정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장애인복지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한 원인에는 장애인복지제도와 같이 복잡한 정책구조를 지닌 제도의 경우, 국가 간 일관성 있는 지표의 개발이 어렵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수준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지자체 혹은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지출 및 예산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수준을 분석한 연구로서 서동명(2009), 김병규·이곤수(2010), 박철현·나운환·이수용(2013) 등이 있고, 국가를 단위로 장애인복지수준을 분석한 연구로서 윤상용(2013), Khan & Jansson(2004)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예산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장애인복지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총지출규모도 중요하지만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도의 질적 내용을 평가해 복지수준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Esping-Anderson, 1990: 19-20; Pierson, 1996: 159; Cox, 2001: 466; Korpi and Pamle, 2003: 432, 박상현, 2011, 재인용).

제도의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개념 중의 하나가 제도적 관대성(institutional generosity)이다. 제도적 관대성이란 급여대상 범위, 급여 수준, 지급시기 및 지급 기간과 같은 제도적 내용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기 위한 개념이다(채구묵,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지출데이터가 공급에 중심을 둔 평가기준이라면 제도적 관대성은 수요에 중심을 둔 평가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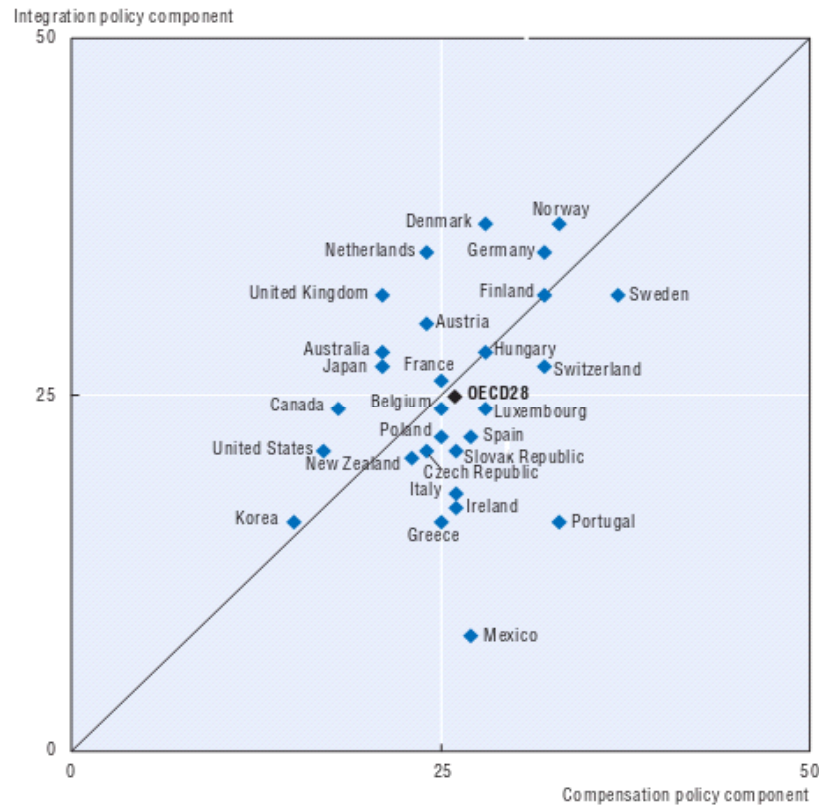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제도적 관대성의 개념이 사용되어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주요 사회보장제도들이었다. 연금이나 실업급여제도 연구에서는 이미 제도적 관대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거나 OECD 국가를 비교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심창학, 2003; 채구묵, 2011; 박상현, 2011). 반면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제도적 관대성 개념을 가지고 복지수준을 논의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그런데 OECD(2010)에서 장애인소득보장 및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제도적 관대성을 평가해 회원국 28개 국가의 장애인복지제도 수준의 다양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OECD 국가들이 장애인복지의 지출규모 뿐만 아니라 제도적 관대성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OECD(2010)의 후속연구로서 어떤 결정요인이 국가 간 장애인복지 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와 같은 거시적 변수들이 장애인복지관대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복지수준의 발달요인을 사회 전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다양성, 장애인복지발달의 이론적 배경 및 장애인복지 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적 함의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II. 문헌 연구

1.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 다양성

〈그림 1〉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수준의 다양성



주: X축의 지수가 높을수록 소득보장 관대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Y축의 지수가 높을수록 통합정책관대성이 높다는 의미임.; 위의 산점도는 2007년 기준 OECD 28개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통합정책의 관대성 지수(각각 50점 총점)를 근거로 만들어졌음.; 관대성 지수는 각 국가의 정부데이터와 OECD (2006, 2007 and 2008),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의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되었음.

출처: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Synthesis Report*.

장애인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는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두 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직결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에 있어 수혜자에게 소득보장 급여와 고용을 위한 서비스 중 어느 것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준거는 근로능력의 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근로무능력이 인정되는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소득보장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고, 반면에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의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복지제도는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제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수준을 제도적 관대성으로 평가한 결과, 소득보장과 고용을 통한 통합정책에 있어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OECD, 2010). OECD 28개 국가의 장애인복지수준을 소득보장과 통합정책의 제도적 관대성으로 평가한 결과를 산점도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 1>과 같다.

2. 이론적 배경

OECD 각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수준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중 어떤 정책에 더욱 비중을 두고 발전시켜 왔는지도 각 국가의 역사적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복지발달에 있어 어떤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국내외의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았으나, 장애인복지발달에 관한 이론이나 장애인복지 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에 관한 명확한 이론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또한 사회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 사회복지발달 이론이 장애인복지발달을 설명하는데 적용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실증적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 사회복지발달 이론은 크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론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혹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설명한 이론으로 산업화 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이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요인을 산업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찾는 이론이다.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킨다. 경제성장은 복지확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욕구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등장케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경제발전론(economic level theory)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이강희·양희택·서대석, 2011). 서구복지국가나 한국 및 일본에서 장애인복지가 발전하게 된 시기는 국민총생산(GDP)이 성장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박철현, 나운환, 이수용, 2013; 이환복, 2001). 또한, 산업화로 인한 탈가족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제도가 확대된다는 합리이론

(rational theory) 또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가 늘어나는 요인으로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국가경제력이 장애인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정치적 이론으로 신제도주의 이론과 권력자원론이 있다. 신제도주의 이론에서는 국가체제, 정치제도, 선거시스템에 따라 복지제도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복지지출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수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보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았다(신동면, 2014). 이같은 결과의 원인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와 같은 전 국민의 공공복지를 함양하는 복지정책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반면, 다수득표제와 소선거구제는 지역의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져 국가전체의 복지제도를 위한 복지지출 및 재분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선호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요인 중 선거제도가 장애인복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권력자원론에서는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정치적 힘을 복지국가의 발전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김태진, 2012). 실제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연금제도, 실업급여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제도적 발전을 추동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파트너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Ebbinghaus, 2010). 그래서 노동조합과 장애인복지와의 연관성은 Esping-Anderson(1990)이 그의 저술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말한 “노동의 상품화”로부터 소외된 동료를 보호하는 정책을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개연성이 크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nick하게도 노동조합의 힘을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자원론이 과연 장애인복지발달에도 적용가능한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회적 이론으로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을 들 수 있다.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의 변천이 시민권의 변천에 따라 개선되고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시민권(citizenship)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말하며 그 주요 구성내용은 자유권(civil right), 정치권(political right), 사회권(social right)이다. 마샬(Marshall, 1950)에 의하면 이러한 시민권은 재산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약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이르는 자유권과 선거권 및 참정권 등의 정치권, 그리고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권(혹은 복지권)으로 점차 확대되었다고 한다(박병현, 2010). 사회권 혹은 복지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른다. 교육과 사회복지제도가 여기에 속한다(이강희·양희택·서대석, 2011). 장애인복지제도가 앞서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운동의 역사를 보면 각종 노동운동, 인종차별운동, 여성운동과 역사적 맥을 함께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있어서도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의 동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권의 확대가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Scotch, 1988).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운동은 이후 일본과 한국으로 전파되어 현재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즉 가장 대표적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장애인의 기본적 사회권인 교육 및 노동의 사회권이 가능해지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고 있다(Barnes, 2007). 이 같은 시민권의 확대는 현대 복지국가 하에서 개인의 생활수준이 그 사람의 계급적 신분이나 경제적 교섭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합의된 일정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제도는 시민권의 내용 확대와 사회권의 확립이라는 진화에 따라 개선되고 확대된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사회권 확대가 장애인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애인의 고등교육참여율을 대리지표로 하여 실증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논의한 장애인복지발달에 상당정도의 논리적 개연성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발달이론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복지발달에 개연성이 있는 사회복지발달 이론

구분	발달이론	결정요인
경제적 이론	산업화 이론	산업화와 경제성장
정치적 이론	신제도주의	정치와 선거제도
	권력자원론	노동조합과 좌파정당
사회적 이론	시민권론	사회권확대

3.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사용한 자료와 분석방법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국내 연구로서 지자체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와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장애인복지수준 변수로서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예산과 장애인직업재활예산 수준 등이 사용되었다.

먼저 국내연구로는 지자체를 분석단위로 한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동명, 2009; 김병규·이근수, 2010)들과 장애인직업재활예산 수준을 분석한 연구(박철현·나운환·이수용, 2013)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 및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동명(2009)에서는 제주도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4개 시·도 205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 예

산자료를 사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 비율과 장애인복지예산 수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요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조례 수가 그리고 행정적 요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비율이 장애인복지예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소득수준과 등록장애인비율,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의 경우에는 1인당 자체수입액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재정자립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규·이곤수(2010)는 대구광역시와 경북지역의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예산과 지출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는 장애인복지예산에 부적인 영향을 그리고 1인당 경제개발비도 장애인복지비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변수로서 기초의회에서의 여성의원비율이 장애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철현·나운환·이수용(2013)에서는 158개 기초 자치단체의 2011년도 예산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업재활예산비율과 직업재활예산 수준 두 영역의 영향요인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재활시설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점증적 요인인 전년도 직업재활시설 예산 비율, 복지수요 요인인 직업재활시설 수, 사회경제적 요인인 인구규모였다. 그리고 직업재활예산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재정적 요인의 재정자립도, 사회경제적 요인의 소득수준과 인구규모, 복지수요 요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직업재활시설 수, 점증적 요인의 전년도 직업재활시설 예산비율이었다.

다음으로 국가를 단위로 한 장애인복지수준 결정요인 연구에는 윤상용(2013)과 Khan & Jansson(2004) 등이 있다. 윤상용(2013)에서는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를 장애인복지지출로 하고 독립변수로 인구학적 요인(장애출현율(전체 인구 중 장애인구비율)), 여성고용비율, 정치적 요인(헌법구조지수), 경제적 요인(1인당 GDP, 실업률, 재정적자비율), 복지국가 요인(OECD(2010)가 유형화한 장애인정책레짐), 장애요인(장애인권운동의 대리지표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을 주요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횡단적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복지 총 지출 결정요인 모형에서는 독립변수 중 사민주의와 실업급여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사민주의 장애인정책레짐 국가가 자유주의 장애인정책레짐 국가보다 장애인서비스 총 지출 비중이 더 높았으며, 실업급여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장애인서비스 총 지출 비중이 더 높았다. 그리고 장애인현금급여 지출 결정요인 모형에서는 사민주의 장애인정책레짐 국가와 조합주의 장애인정책레짐 국가가 자유주의 장애인정책레짐 국가보다 장애인현금급여 지출 비중이 더 높았으며, 실업급여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장애인현금급여 지출 비중이 더 높았다. 그리고 Khan & Jansson(2004)는 OECD 13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구축하여 실업률을 비롯한 경제적 변수들이 상병급여와 장애연금, 산재급여, 유족급여 등 장애급여 지출 및 이들 모두를 합한 총 장애급여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상병급여 지출

은 증가하고 장애연금 지출은 감소하는 등 경제적 변수가 개별 장애 급여 지출에 일정 수준에서 영향을 주었지만 전체 장애급여 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 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지출데이터를 사용해 장애인복지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출데이터를 통해서는 복지제도의 질적인 측면 즉 제도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Esping-Anderson, 1990: 19-20; Pierson, 1996: 159; Cox, 2001: 466; Korpi and Pamle, 2003: 432, 박상현, 2011, 재인용). 왜냐하면 지출 규모나 예산과 같은 정량적 지표들로는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이나 혜택의 정도 등과 같은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지출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실제 대상자에게는 복지혜택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수치상으로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오류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예산과 같은 지출 지표 보다는 복지제도의 내용을 평가한 질적 지표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출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제도적 관대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결정요인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와 같은 거시적 변수들을 사용해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는 요인을 사회 전반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양대 축인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의 관대성을 모두 평가한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장애인복지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장애인복지수준 결정요인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구결과
서동명 (2009)	205개 기초 자치단체	회귀분석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장애인복지 예산수준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1인당 자체 수입액(+) 1인당보조금(-) 재정자주도(-) 장애인 복지 담당공무원 비율(+) 소득수준(+) 등록장애인비율(+)
김병규, 이곤수 (2010)	대구광역시 8개 기초 자치단체 · 경상북도 22개 기초 자치단체	통합회귀분석 OL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1인당 장애인복지비	복지수요 변수 재정적·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재정구조적 변수 접충적 변수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지방선거실시(-) 전년도 1인당 장애인복지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구결과
박철현, 나운환, 이수용 (2013)	166개 시·군·구 (63개 시, 39개 군, 64개 구)	회귀분석	직업재활시설 예산비율 직업재활시설 예산수준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사회적·경제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점증적 요인	인구규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직업재활 시설 수(+) 전년도 직업재활시설 예산비율(+)
윤상용 (2013)	22개국	회귀분석	장애인복지 총 지출 장애인현금 급여 지출 장애인현물 급여 지출	장애인구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복지국가레짐	사민주의(+) 조합주의(+) 실업급여지출(+)
Khan & Jansson (2004)	13개국	회귀분석	1인당 총 장애급여지출 1인당 상병급여 1인당 산재급여 1인당 장애연금 1인당 유족급여	실업률 1인당 GDP	실업률(-),(+) 1인당 GDP_log(+)

III. 연구 방법

1.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본 고의 연구 목적은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을 사회전반에서 찾아보기 위해 장애인복지관대성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H1: 국가경제력은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선거제도 유형은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노동조합의 힘은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장애인의 사회권확대는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복지관대성과 개별 결정요인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점도에서 회귀선으로 그려 각 결정요인과 장애인복지

관대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개별 결정요인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결정요인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2. 분석자료 및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OECD 28개 회원국의 장애인복지관대성 지수와 경제적 요인(1인당 GDP), 정치적 요인(선거제도 유형 및 노동조합결성율), 사회적 요인(장애인고등교육참여율)이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자료설명은 아래 해당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변수와 자료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석에 활용한 변수¹⁾

구분	주요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종속 변수	장애인복지관대성	사회보장관대성 통합정책관대성 종합지수	OECD (2010)
독립 변수	경제적 변수	1인당 GDP	OECD Stat
	정치적 변수	선거제도 유형	IDEA
	정치적 변수	노동조합결성율	OECD Stat
	사회적 변수	고등교육률	OECD Stat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OECD가 2007년 기준 회원국 28개 국가의 소득보장 및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제도적 관대성을 평가한 지수이다. OECD(2010)에서는 장애인복지관대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보장과 통합정책의 제도적 관대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구성하였다. 장애인복지관대성 지표는 소득보장과 통합정책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영역은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항목은 0-5점 스케일로 0점이 가장 낮은 관대성을 의미하고 5점이

1) 장애인정책 관대성 지수: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Synthesis Report.

1인당 GDP: OECD Stat, Gross domestic product(GDP), 2007 기준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

선거제도 유형: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nternational IDEA),

<http://www.idea.int/esd/world.cfm>,

노동결성률: OECD Stat, Dataset: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ur-force status, 2007 기준.

고등교육률: OECD.Stat, Dataset: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ur-force status, 2005 기준.

가장 높은 관대성을 의미한다. 각 영역의 관대성 지수는 세부항목의 총합으로 50점이 최고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 통합정책 그리고 이 두 지수를 합한 종합지수 3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OECD(2010)가 개발한 장애인복지관대성 지표의 세부항목 구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OECD 장애인복지관대성 지표 항목²⁾

구분	소득보장	고용보장
1	급여대상 인구	서비스 접근성
2	장애인 및 노동무능력자 대상 급여의 최소기준	지원체계의 단순성
3	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 대상 급여의 최대기준	고용주 대상 강제조항
4	장애 및 근로무능력 급여의 소득대체율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5	수급자의 통제정도	임금보조 프로그램
6	의학적 사정의 적용 정도	보호 고용 프로그램
7	직업능력평가 기준	직업재활서비스의 포괄성
8	상병급여수준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시기
9	상병급여 지급 기간	급여정지를 위한 모니터링
10	상병급여 수급자의 모니터링 정도	수급자를 위한 근로 유인책

위의 지표를 토대로 OECD 28개 국가의 종속변수의 기술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종속변수의 기술적 특성³⁾

국가 \ 변수	소득보장	통합정책	종합지수
호주	21	28	49
오스트리아	24	30	54
벨기에	25	24	49
캐나다	18	24	42
체코	24	21	45
덴마크	28	37	65

2)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Synthesis Report.

3)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Synthesis Report.

국가 \ 변수	소득보장	통합정책	종합지수
핀란드	32	32	64
프랑스	25	26	51
독일	32	35	67
그리스	25	16	41
헝가리	28	28	56
아일랜드	26	17	43
이탈리아	26	18	44
일본	21	27	48
한국	15	16	31
룩셈부르크	28	24	52
멕시코	27	8	35
네덜란드	24	35	59
뉴질랜드	23	21	44
노르웨이	33	37	70
폴란드	25	22	47
포르투갈	33	16	49
슬로바키아	26	21	47
스페인	27	22	49
스웨덴	37	32	69
스위스	32	27	59
영국	21	32	53
미국	17	21	38

(2) 독립변수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사회전반에서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사회적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경제적 변수로 국가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정치적 변수로 선거제도 유형과 노동조합결성율, 사회적 변수로 장애인고등교육참여율을 결정요인 즉 독립변수로 투입해 분석한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한 장애인 고등교육참여율은 연령 25~64세 장애인의 대학 및 직업교육 참여율이다. 모든 독립변수에 사용된 자료의 기준연도는 2007년 기준이고, 장애인고등교육참여율은 2005년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OECD 28개 국가의 독립변수의 기술적 특성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독립변수의 기술적 특성

(단위: 달러, %)

국가 \ 변수	1인당 GDP*	선거제도유형	노동조합 결성율	고등교육율
호주	35,305	다수대표제	22.3	32
오스트리아	34,702	비례대표제	33.9	25
벨기에	33,057	비례대표제	53.7	31
캐나다	36,213	다수대표제	27.7	46
체코	22,237	비례대표제	19.7	13
덴마크	34,083	비례대표제	70.7	34
핀란드	32,065	비례대표제	70.6	35
프랑스	30,398	다수대표제	7.7	25
독일	32,632	혼합형	21.7	25
그리스	25,396	비례대표제	24.1	21
헝가리	17,314	혼합형	17.5	17
아일랜드	40,446	비례대표제	34.0	29
이탈리아	29,540	비례대표제	33.8	12
일본	30,446	혼합형	18.8	40
한국	24,220	혼합형	9.9	32
룩셈부르크	67,003	비례대표제	41.4	27
멕시코	12,342	혼합형	16.9	15
네덜란드	37,313	비례대표제	20.6	30
뉴질랜드	25,590	혼합형	20.9	-
노르웨이	48,360	비례대표제	54.9	33
폴란드	13,808	비례대표제	18.1	17
포르투갈	22,073	비례대표제	21.6	13
슬로바키아	16,482	비례대표제	22.8	14
스페인	27,863	비례대표제	14.6	29
스웨덴	34,332	비례대표제	76.5	30
스위스	38,916	비례대표제	19.3	29
영국	34,616	다수대표제	28.6	30
미국	44,237	다수대표제	12.0	39

* 분석을 위해 1인당 GDP는 달러 1,000 단위로 사용하였음.

IV. 분석 결과

1. 개별 결정요인과 장애인복지 관대성 간의 관계 분석결과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기 위해 개별 결정요인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산점도에 회귀선을 그려넣어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산점도들은 장애인복지 관대성 결정요인 각 변수들에 따라 네 가지 세트의 그림들, 즉 1인당 GDP(그림 2), 선거제도 유형(그림 3), 노동조합결성율(그림 4), 고등교육참여율(그림 5)이 제시된다. 그리고 각 그림 세트는 장애인복지관대성을 측정하는 세 가지 종속변수 즉 소득보장, 통합정책, 종합지수에 따라 세 개의 패널(A, B, C)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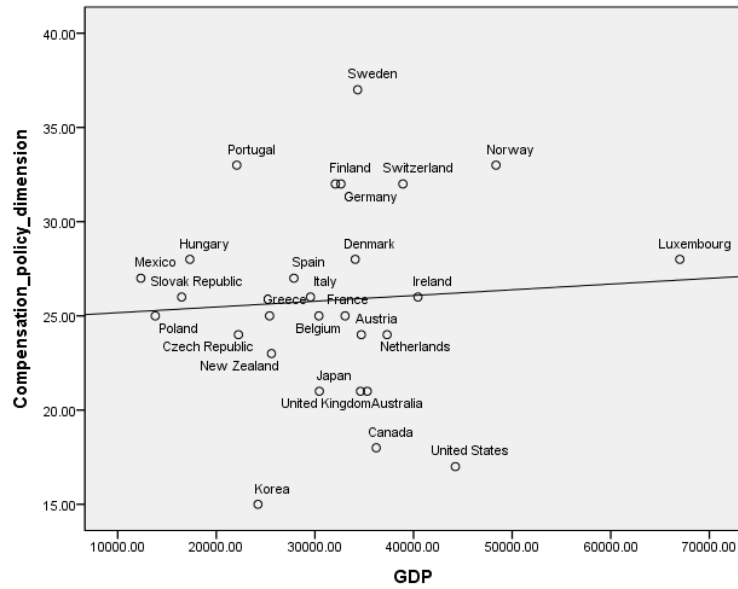
(1) GDP와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 분석

국가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DP와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 1인당 GDP와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 간의 관계는 <그림 2-A>에서 보듯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1인당 GDP와 통합정책관대성 간의 관계는 <그림 2-B>에서 보듯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세 번째, GDP와 장애인복지관대성 종합지수 간에는 <그림 2-C>에서 보듯이 $p < .10$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p < .10$ 까지 유의하다고 해석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수준을 $p < .05$ 를 기준으로 보지만, 총 연구 대상 국가가 28개임을 고려할 때 $p < .10$ 까지 유의한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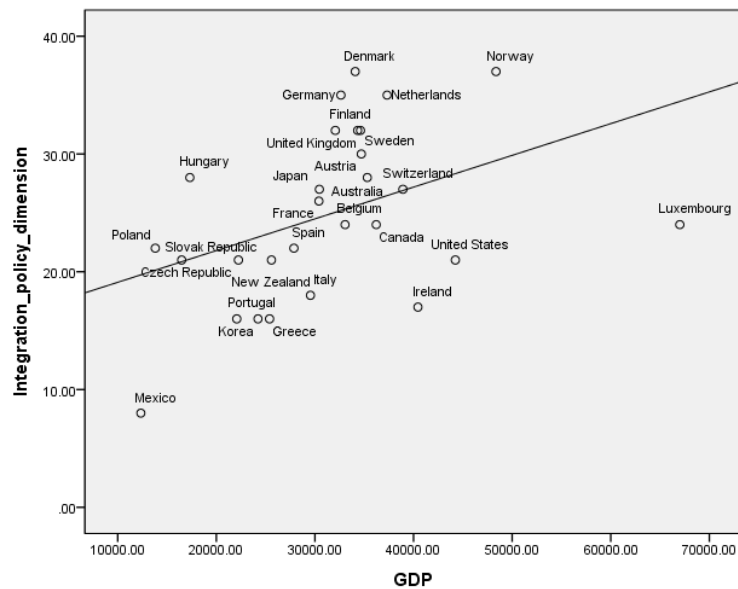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과 산점도의 국가 분포를 종합해 함의를 도출해 보면, 소득보장관대성은 대다수 국가들이 OECD 평균에 수렴하고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GDP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간에 소득보장관대성에 큰 차이가 없다. 반면, GDP와 통합정책 간에는 정적 관계가 확인된다. 종합지수를 통해 보면, 역시 사민주의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국가경제력은 중상위이고 장애인복지관대성은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합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그보다 약간 낮은 장애인복지관대성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GDP는 OECD 평균 이상이지만 소득보장은 낮고 통합정책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2〉 1인당 GDP와 장애인복지관대성 관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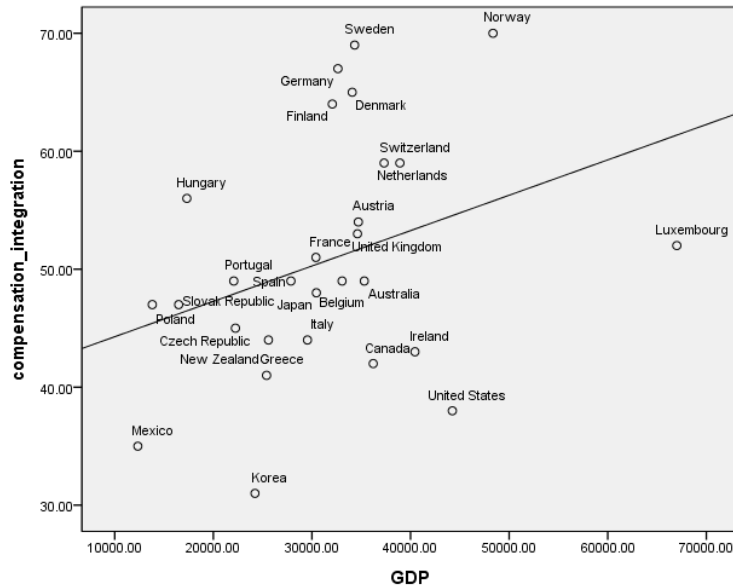
〈그림 2-A〉 GDP와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B=.030$, $t=.340$)



〈그림 2-B〉 GDP와 통합정책관대성($B=.269^*$, $t=2.333^*$)



〈그림 2-C〉 GDP와 장애인복지관대성 종합지수(B=.300, t=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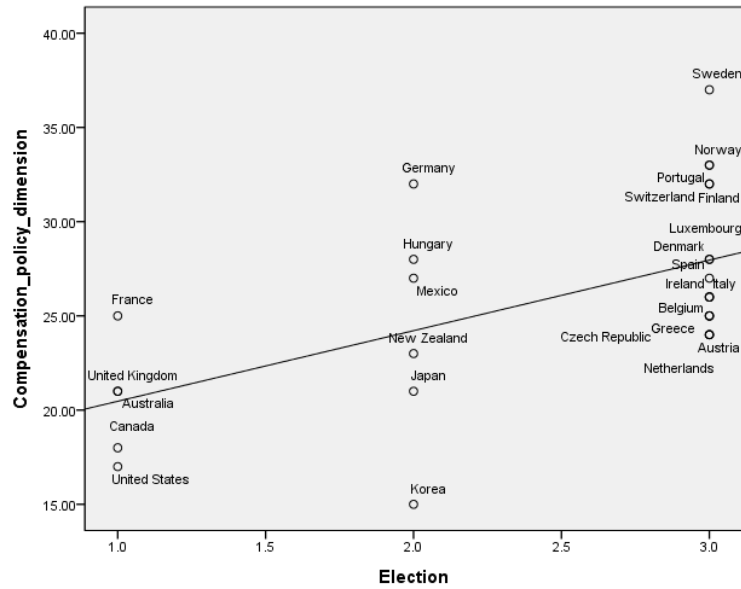
(2)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 분석

국가의 정치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첫 번째,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 간의 관계는 <그림 3-A>에서 보듯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선거제도 유형과 통합정책관대성 간의 관계는 <그림 3-B>에서 보듯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복지관대성 종합지수 간에는 <그림 3-C>에서 보듯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산점도에 나타난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관계를 종합해 보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소득보장관대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였고, 혼합제 국가 중에는 독일이 가장 높았으며, 다수득표제 국가 중에는 프랑스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장애인 소득보장관대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적인 관계의 회귀계수가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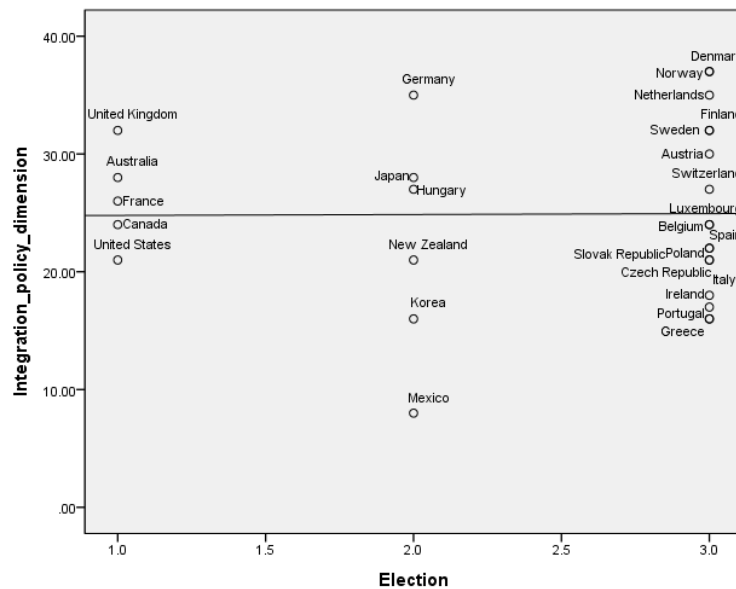
한편, 비례대표제와 통합정책관대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다수득표제 국가에 속하는 국가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OECD 평균 이상의 통합정책관대성을 나타내고 있어 거의 좌우 대칭의 산점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면, 정치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선거제도 유형은 장애인복지관대성과의 관계에서 소득보장에만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선거제도유형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관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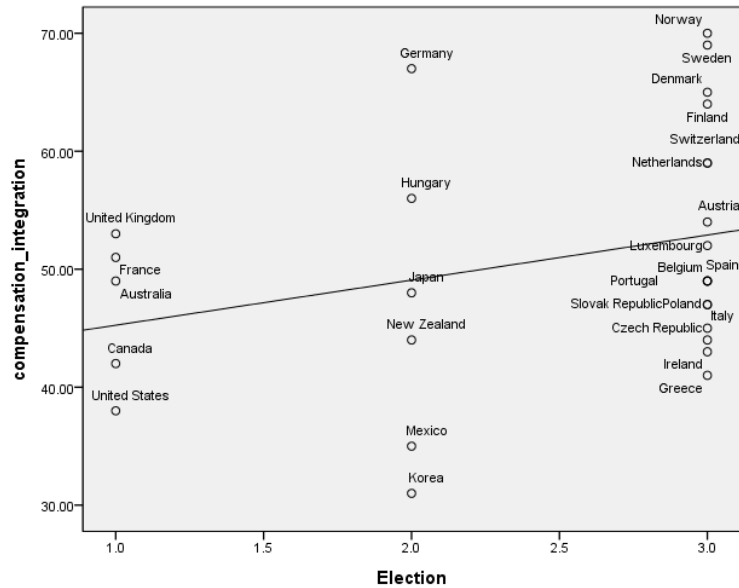
〈그림 3-A〉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B=3.746$, $t=3.619^{**}$)



〈그림 3-B〉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통합정책 관대성($B=.076$, $t=.042$)



〈그림 3-C〉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복지관대성 종합지수($B=3.822$, $t=1.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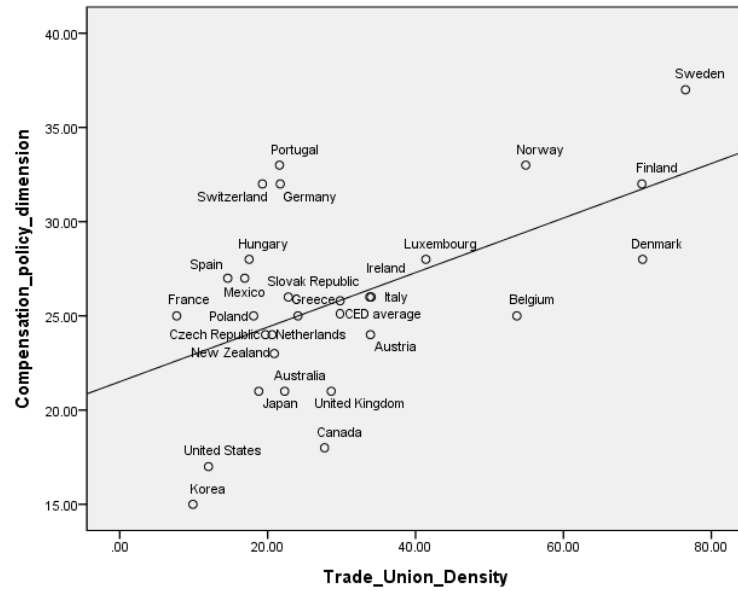


(3) 노동조합결성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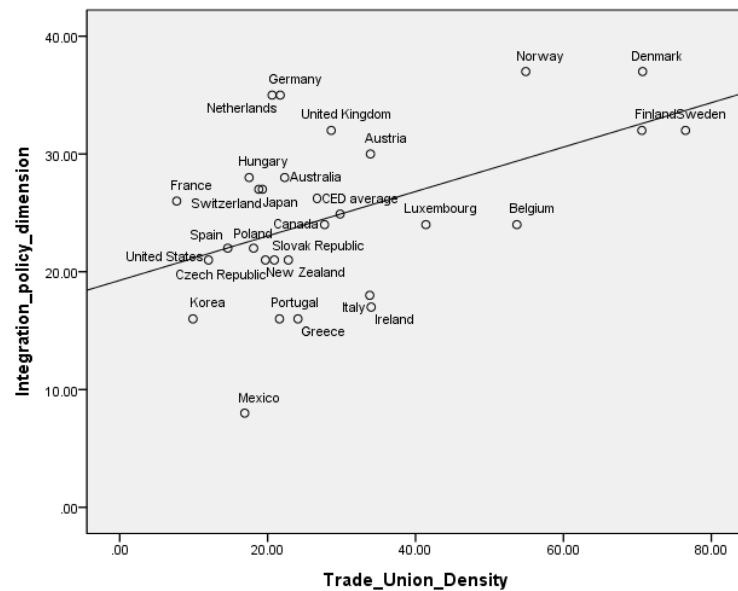
사회적 파트너인 노동조합의 힘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첫 번째, 노동조합결성율과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 간의 관계는 <그림 4-A>에서 보듯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노동조합결성율과 통합정책관대성 간에는 <그림 4-B>에서 보듯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세 번째, 노동조합결성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 종합지수 간에는 <그림 4-C>에서 보듯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산점도를 통해 살펴보면, 노동조합결성율이 높은 국가가 소득보장 및 통합정책 관대성도 높은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국가 위치들을 보아도 패널 A, B, C에서 국가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결성율은 투입된 변수 중 장애인복지관대성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사회적 파트너인 노동조합의 힘은 장애인복지관대성 측면에서 소득보장, 통합정책, 관대성종합지수 모두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노동조합결성률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관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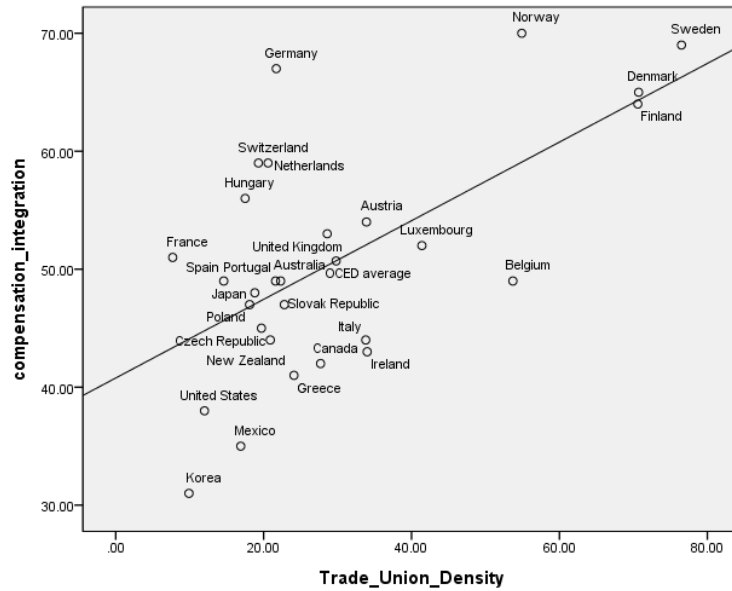
〈그림 4-A〉 노동조합결성률과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B=.145$, $t=3.271^{**}$)



〈그림 4-B〉 노동조합결성률과 통합정책관대성($B=.189$, $t=2.920^{**}$)



〈그림 4-C〉 노동조합결성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 종합지수($B=.333$, $t=4.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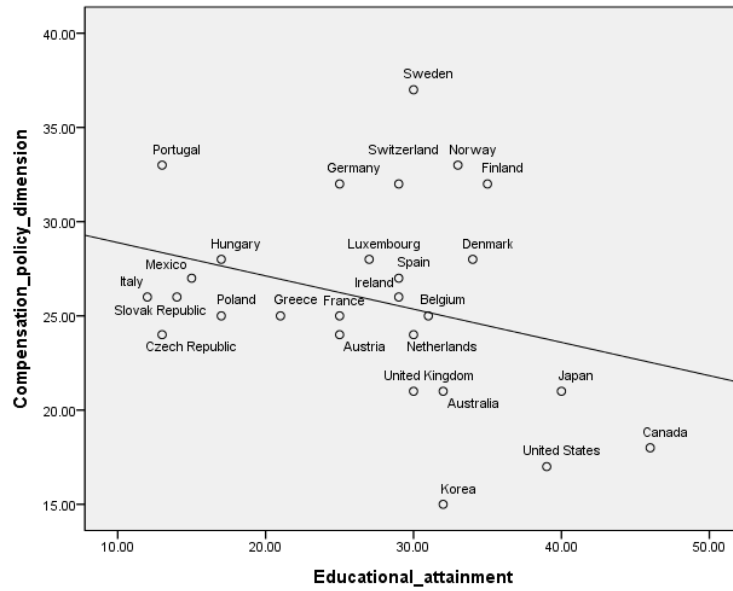
(4) 고등교육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 분석

장애인의 사회권 확대 정도를 대리하는 지표로서 고등교육참여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첫 번째, 고등교육참여율과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 간에는 <그림 5-A>에서 보듯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고등교육참여율과 통합정책관대성 간에는 <그림 5-B>에서 보듯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세 번째, 고등교육참여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 종합지수 간에는 <그림 5-C>에서 보듯이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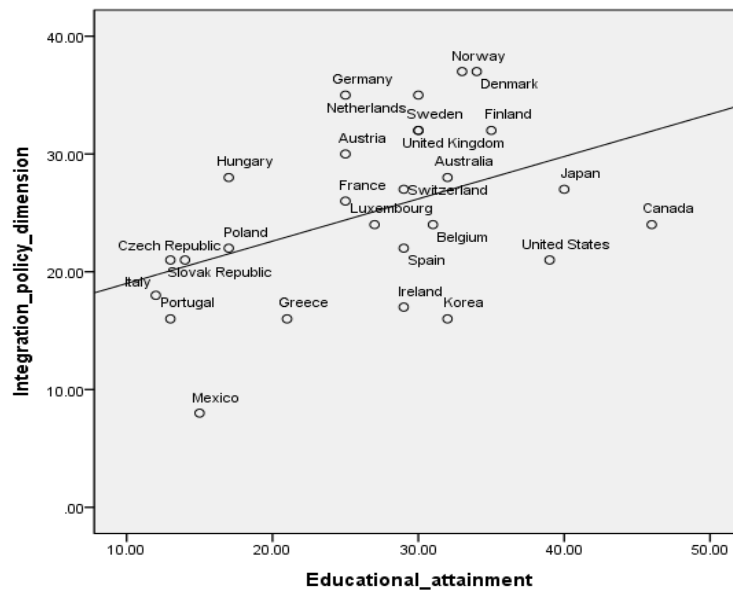
산점도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율과 소득보장 간에 우하향하는 회귀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럽 상당수의 국가들이 고등교육율은 낮고 소득보장이 높아 왼쪽에 포진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일본과 미국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고등교육율과 통합정책관대성 간에는 어느 정도 정적관계가 있어 우상향하는 회귀선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고등교육율이 높으면서 소득보장관대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이었고, 고등교육율과 통합정책관대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장애인의 사회권 확대 정도를 대리해서 보여주는 고등교육참여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에서 통합정책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고등교육참여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의 관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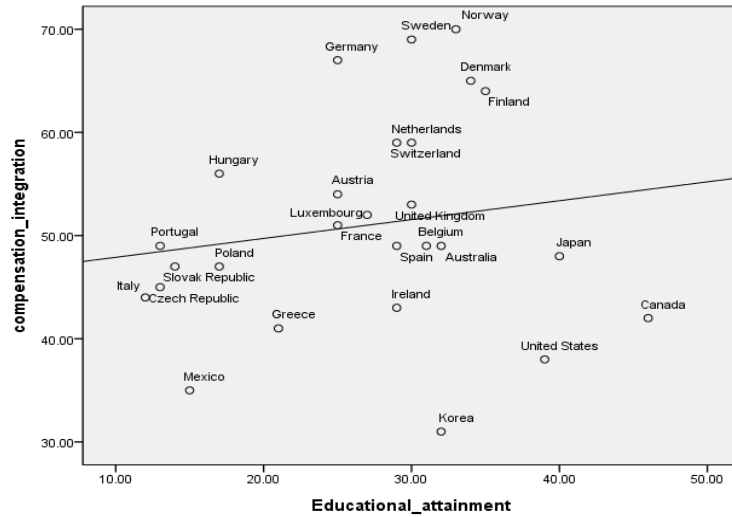
〈그림 5-A〉 고등교육참여율과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B=-.176$, $t=-1.610$)



〈그림 5-B〉 고등교육율과 통합정책관대성($B= .359$, $t=2.453^*$)



〈그림 5-C〉 고등교육참여율과 장애인복지관대성 종합지수(B=.183, t=.820)



위에서 살펴본 장애인복지관대성과 개별 결정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DP는 장애인통합정책관대성과 관대성종합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거제도 유형은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노동조합결성율은 장애인 소득보장관대성, 통합정책관대성 및 관대성종합지수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장애인고등교육참여율은 통합정책관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논의한 개별결정요인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개별결정요인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소득보장		통합정책		종합지수	
	B	SE	B	SE	B	SE
GDP	.030	.089	.269*	.116	.300 ⁺	.166
선거제도 유형	3.746**	1.035	.076	1.798	3.822	2.381
노동조합결성율	.145**	.044	.189**	.065	.333***	.080
장애인 고등교육율	-.176	.110	.359*	.146	.183	.223

주): ⁺p<.10, *p<.05, **p<.01, ***p<.001

2. 다중회귀분석

앞에서 개별 결정요인변수들의 장애인복지관대성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모든 결정요인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장애인복지관대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본 분석에 투입한 결정요인들 간에는 VIF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모든 독립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해 모든 변수들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모델 1(ENTER)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GDP와 선거제도 유형은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결성율은 소득보장은 $p<.05$, 통합정책은 $p<.10$, 종합지수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교육참여율은 소득보장관대성과의 관계에서 $p<.10$ 수준에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계속 반복해 투입하면서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고 유의미하지 않는 변수들은 회귀식에서 제거하여 최적의 회귀식을 구성해 주는 모델 2(STEPWIS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제도 유형과 소득보장관대성 간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결성율은 통합정책 관대성과의 관계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고, 종합지수와와의 관계에서도 $p<.01$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다중회귀분석을 정리하면, 모델 1과 모델 2를 종합해서 볼 때 두 개 모델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노동조합결성율과 장애인통합정책 및 종합지수 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등교육율과 소득보장관대성 간의 관계는 모델 1에서만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관계를 보이고 모델 2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2에서 나타난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소득보장 간의 유의한 정적관계는 모델 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별 결정요인 관계 분석 결과와 일치하므로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 <표 8>과 <표 9>는 이상에서 논의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모델 1 다중회귀분석 결과(ENTER)

독립변수	종속변수					
	소득보장		통합정책		종합지수	
	B	SE	B	SE	B	SE
GDP	.056	.084	.094	.138	.150	.185
선거제도 유형	1.197	1.291	-.940	2.120	.257	2.832
노동조합결성율	.141*	.052	.163 ⁺	.085	.304*	.113
장애인 고등교육율	-.253 ⁺	.123	.172	.202	-.081	.269

주): +p<.10, *p<.05, **p<.01, ***p<.001

〈표 9〉 모델 2 다중회귀분석 결과(STEPWISE)

독립변수	종속변수					
	소득보장		통합정책		종합지수	
	B	SE	B	SE	B	SE
GDP						
선거제도 유형	3.713**	1.060				
노동조합결성율			.186*	.067	.330**	.084
장애인 고등교육율						

주): +p<.10, *p<.05, **p<.01,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OECD 회원국 28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대성 결정요인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DP와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의 관계는 개별결정요인 관계분석에서 장애인통합정책관대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경제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에서 모델 1과 모델 2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대상 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계적 한계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1인당 GDP와 장애인통합정책관대성 간의 개별결정요인분석에서 회귀선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국가경제력과 통합정책관대성 즉 고용을 위한 서비스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경제력이 수반되어야 장애인의 고용

과 직업재활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는 실증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치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선거제도 유형과 장애인복지관대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거제도 유형은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과의 관계에서 상당수준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의회의 비례대표비율과 관대한 장애 및 근로무능력 급여수준 간에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례대표제가 다수득표제에 비해 공공복지제도와 같은 전국의제가 선호되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과 같은 소수자를 대변하는 의원이 의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어 소수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신제도주의적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선거제도 유형과 통합정책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는 분석결과는 다수득표제 국가들의 경우 소득보장 관대성은 낮지만 통합정책 관대성은 비례대표제 및 혼합제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사회적 파트너인 노동조합의 힘과 장애인복지관대성 간에 관계는 개별결정요인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다중회귀분석 모델 1과 모델 2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강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요인이 바로 노동조합결성율이다. 이는 장애 및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전체 사회정책 속에 포함시켜 높은 제도적 관대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노동조합결성율이 높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결과는 노동조합의 힘과 장애인복지 간의 관계를 역사적 및 이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및 실천적으로 의미있는 발견이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권 확대 대리지표인 고등교육율과 소득보장과의 관계의 경우, 다중회귀분석 모델 1에서 부적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은 장애인고등교육율은 높지만 장애인소득보장 관대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 회귀선이 우하향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나라들이다. 반면, 포르투갈, 독일, 헝가리와 같은 나라들은 장애인 고등교육율은 낮지만 장애인소득보장 관대성은 높아 대조를 보인다. 그리고 고등교육참여율과 통합정책관대성은 개별결정요인분석에서만 유의했다. 장애인고등교육율이 높고 통합정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와 덴마크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장애인의 고등교육율은 높지만 통합정책 수준은 OECD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적 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의 고등교육정책, 소득보장, 통합정책 간에 나타나는 장애인복지다양성 즉 제도적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한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경제력에 걸맞게 장애인복지수준을 제고하려면 장애인소득보장과 통합정책 수준을 양적 및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한 전체적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가 더

욱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의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 파트너인 노동조합이 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와 고용주는 노동조합을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등교육정책과 통합정책 간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고등교육율은 OECD 평균 이상인데 반해, 고등교육 이후 후속적 제도인 고용을 위한 통합정책의 제도적 관대성 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장애인통합정책 관련 예산확대와 제도적 관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분석에서의 가장 큰 한계는 샘플 수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횡단적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샘플 수의 부족으로 인해 개별결정요인관계분석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독립변수들이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기여도가 살아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통계적 제한성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확증하긴 어렵고 상관이 있는 정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향후 분석대상을 늘리거나 종단적 연구를 통해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하여 통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명확한 장애인복지발전을 초래하는 결정요인 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

셋째, 장애인복지발달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장애인당사자들의 조직화된 요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례연구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혹은 장애인조직의 힘을 측정하는 국제적 지표를 구할 수 없어 사회권이 확대된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리지표로서 장애인고등교육참여율을 사용하였다. 향후에는 장애인의 정치적 및 사회적 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들이 개발되어 장애인당사자의 역할이 장애인복지발달에 미친 영향이 실증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 바란다.

참고문헌

- 김병규·이곤수, 2010, “지방분권화와 장애인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479-497.
- 김상진, 2002, “한·일 장애인 복지정책 비교 연구 :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태진, 2012,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 박경순, 2004,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정책네트워크 관점”, 『직업재활연구』 14(2), 23-55.

- 박병현, 2010, 『사회복지의 역사』, 공동체.
- 박상현, 2011, “연금제도의 결정요인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5-115.
- 박철현·나운환·이수용, 2013,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시설 예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23(3), 41-63.
- 서동명, 2009,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485.
- 신동면, 2014, “선거제도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0년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 435-454.
- 심창학, 2003,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관대성,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3(3), 1-25.
- 윤상용, 2013, “OECD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추이 및 결정 요인 연구”, 『생활과학논총』 17(1), 55-68.
- 이강희·양희택·서대석, 2011,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 이환복, 2001, “한국장애인고용정책집행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채구목, 2011,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한국사회학』 45(1), 1-36.
- Barnes, C., 2007, “Disability Activism and the Struggle for Change”, *Education,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2(3), 203-221.
- Ebbinghaus, B., 2010, “Unions and Employers”, 『*The Oxford Handbook of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196-210.
- Esping-Andersen, G., 1998,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han, J., Jansson, B., 2004, “Effects of Macroeconomic Trends on Social Security Spending Due to Sickness and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1), 2004-2009.
- OECD Stat, 2005, Dataset: Educational Attainment.
- OECD Stat, 2007, Dataset: Labour-force Status.
-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Synthesis Report*.
- Pfeiffer, D., 1993, “Overview of the Disability Movement: History, Legislative Record, and Political Implic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21(4), 724-734.
- Scotch R., 1988, “Disability as the Basis for a Social Movement: Advocacy and the Politics of Defini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4(1), 159-172.
-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
- <http://www.idea.int/esd/world.cfm>